

# 오늘부터 의대수업 속속 재개... '집단유급' 현실화 우려도

전북대 "집단유급 막기 위한 결정" 비대면 수업 병행 결손학생 최소화 가톨릭대·성균관대 등 15일 개강 중앙대도 다음달 1일부터 수업 재개 거부엔 '유급'... 대학, 고민 깊어져

정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가 수업 재개를 알리고 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개강 이후에도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대는 8일부터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한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0여명이 휴학을 신청하자, 개강을 연기하고 수업을 미뤄왔다.

대부분 의대의 학적상 수업일수의 3



전국 의과대학 예비 전공의 인턴 상반기 수련 임용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 병원 인턴 생활관 휴게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시스

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이때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돼 장기간 결석은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난 2월부터 수업을 중단하거나 개강을 미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1조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습과 방학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이상 개강을 늦출 경우 수업일수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업이 시작돼야 한다.

이에 의과대학 수업을 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비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해서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최대한 진행해야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전국 의대생이 동맹 휴학 등 집단 움직임에 돌입한 2월 20일부터 5차례 휴강을 연장해 온 경북대도 8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본과 1~2학년 강의는 8일 재개하고, 본과 3~4학년은 15일부터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개강을 미뤄오다 8일로 예정했던 원광대는 개강을 한 주 더 연기했다. 전남대, 원광대도 이달 중순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 대학들도 이달 중순 이후 개강하는 곳이 잇따를 전망이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도 15일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중앙대 의대는 다음 달 1일 개강하기로 했다.

이처럼 수업이 재개됐음에도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동맹휴학은 허가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학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의대생의 휴학 신청이 거부된 상태로 수업 거부가 이어져 유급 처리될 경우, 학생은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하고 1000만원 안팎의 등록금도 환불받을 수 없다.

아직 의대 수업을 재개하지 않은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의대가 개강하는 만큼, 다른 대학도 동향을 살피고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개강을 연기하며 시기를 보고 있지만, 법정 수업일수를 맞춰야 하므로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개강 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도 우려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집계 결과 지난 4일까지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은 누적 1만366건이다. 전체 의대생(1만 8793명)의 55.2% 수준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1면 '개발 공약만 2239건'서 계속

## 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이번주 감사의견서 발송

배상 비율 20%~60% 예상에 투자자들 "100% 배상" 주장 일부 은행, 이미 배상협의 시작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홍콩 H지수(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추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된 판매사에 감사의견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은 은행과 금감원의 배상안에 불만족스러움을 표출하며 '100% 배상'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은행 등 판매사에 부당·위법 행위 등을 담은 감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의견서에는 은행별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절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명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기반으로 홍콩 H지수 ELS 판매 은행들의 답변을 모은 뒤



금융감독원 전경. /허정윤 기자

제재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신한투자 등 판매사 11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이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및 투자자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적용받을 배상 비율이 20%~

60% 사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은행이 15조 9000억원(24만 8000계좌), 증권이 3조 4000억원(15만 5000계좌)으로 총 19조 3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의 홍콩 ELS 잔액은 약 10조원에 달하며, 홍콩 H지수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은행권의 배상 규모는 최소 2조원(40% 배상 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들과 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의결하고 일부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확인되자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투자자별 구체적인 배상비율과 배상액 규모 등은 밝힐 수 없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결국 개별 배상 속도는 판매사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기 도래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정해

지면서 배상액 규모는 점차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배상 협의가 본격화해도 배상 시기 자체는 늦어질 수 있다. 판매사가 제시한 배상 비율을 투자자가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부 홍콩 H지수 투자자 단체는 ELS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이 은행권에서 판매된 사실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자율 배상이 아니라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의 성토는 국회의원 선거 유세 현장으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피해자 호소문'을 전달하고 피켓 시위에 나서고 있다.

홍콩 H지수 ELS에 2021년 가입했다는 한 투자자는 "만기 후에 불완전 상품을 예금처럼 소개하고 권유한 은행 직원을 형사 고소해 볼 생각도 있다"며 "그만큼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전국적 매매가격 하락폭 줄어 들고 서울, 상승폭 커져

특히 민생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GTX 노선 확대와 철도·도로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건설 ▲울산 그린벨트 규제 완화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발표 ▲기업형 장기임대(실버스테이) 도입 ▲용인 특례시 건설·건축 규제 완화 등 국토 개발과 관련된 굵직한 내용이 수차례 언급됐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당별 부동산 정책의 내용이나 실효성을 떠나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4월 위기설'의 현실화 여부 등이 총선 이후 확인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개발공약이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시점이어서 현실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나 산업단지, 지하화 등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은 당장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 당시 발표했던 주요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텐데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은 관망세가 지배적이지만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며, 매매가도 서울의 경우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지난 한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줄은 가운데 서울은 상승폭이 커졌다. /안상미 기자 smahn@

## 25~54세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 OECD 31위 머물러

韓,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 78.1% 일본은 9%p 높은 87% '6위' 올라

우리나라는 30~40대가 주축인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에서 일본 및 유럽 국가 등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만 25~54세 고용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78.1%로 집계됐다. 이같이 핵심 연령대에서도 OECD 회원국 평균인 80.0%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반면 우리에 비해 수치가 약 9% 포인트(p) 높은 일본(87.0%)은 6위에 올랐다.

유럽 국가 중에는 이 부문 85%를 넘긴 곳이 무려 14개국이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다. 또 폴란드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등도 85% 이상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뉴질랜드가

86.3%, 미국이 80.7%였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83.9%)와 캐나다(84.5%)의 경우도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밖에 영국(84.3%)과 프랑스(82.4%), 덴마크(83.5%), 라트비아(82.1%), 리투아니아(84.5%), 노르웨이(83.9%) 등도 OECD 평균치를 웃돌았다.

통계에 따르면 38개국 가운데 28개국이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80%대를 기록했다. 또 주요 7개국(G7) 평균과

유럽연합(EU) 평균은 모두 82.4%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의 25~54세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4분기 69.0%에 머물렀다. 이는 일본 여성(80.8%)에 비해 무려 11.8%p 낮은 수치이다. 미국이 75.2%, 영국이 80.6%, 독일이 81.1% 등이다. 이 나이대 여성 고용률의 38개국 평균은 72.4%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나타난 고용지표 회복세는 양적 측면에 비해 질적, 체감적 측면에서 충분한 정도였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